

## 한국의 핵 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합의: 방어적 현실주의(Defensive Realism) 중심으로

김 석 준\*

### · 요약 ·

2017년 북한의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성공 이후 한국의 핵 정책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그간 관련 정책의 분석, 진단 및 처방에 관한 토론에서 국제안보이론에 근거한 검토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현재 국제안보이론의 주요 이론인 현실주의, 특히 방어적 현실주의가 한국의 핵 정책에 시사하는 점을 분석한다. 방어적 현실주의 이론은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힘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국이 자체 핵 프로그램을 보유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동 이론은 그 과정에서 관련 주변국들의 불안과 염려를 줄이기 위해, 핵을 오직 방어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의도를 드러낼 수 있는 실질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한국의 핵 프로그램 보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때문에, 한국의 핵 프로그램 보유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그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국가의 생존만큼 중요한 이익은 없다고 주장한다.

주제어 : 방어적 현실주의, 핵 정책, 생존, 한반도 안정

### I. 서론

2017년 북한의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성공으로 한국의 핵 정책에 대한 관심과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북한은 2017년 화성 15형을 시험 발사하여 미국 본토 공격 능력을 보여주었고, 9월에는 수소폭탄 시험에 성공하였다. 북한의 핵 개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성공으로, 미국의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ce)에 의지해 왔던 기존 한국

\*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의 안보 정책이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정치가 및 안보 전문가 사이에서는 대북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체로 미국의 확장억제, 미국의 전술핵 한반도 배치, 우리의 독자적 핵무장 등으로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이다. 첫째, 정부 및 대다수 전문가들은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에 의존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sup>1)</sup> 즉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다. 2023년 4월 26일 한미 양 정상은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선언하였다.<sup>2)</sup> 박휘락(2020)은 북한의 핵무기 증강에 대해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을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sup>3)</sup> 둘째, 비슷한 맥락으로 정치가 및 학계 일부에서는 미국의 확장억제가 충분히 신뢰받기 위해서 미국의 전술핵 한반도 배치 및 미국의 핵 공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sup>4)</sup> 북한의 핵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미국 핵무기의 한반도 배치가 최선이라는 것이다. 셋째, 정치가 및 안보 전문가 사이에서는 소수 의견으로 한국의 자체 핵 프로그램 보유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sup>5)</sup>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2023. 1월 11일 2023년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한국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자체 핵보유를 언급하기도 하였다.<sup>6)</sup>

하지만 한국의 자체 핵 프로그램 개발 및 그 이후의 한국 핵 정책에 대한 국제정치 이론 검토는 부족한 실정이다. 현실주의 이론은 한국의 핵 정책에 대해 핵 균형(nuclear balance)을 위한 한국의 독자적인 핵 프로그램 보유라는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자체 핵 프로그램은 남북간 힘의 균형을 가져옴으로써 장기적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한반도 안정화를 가져올 것이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핵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주변 국가의 불안과 우려를 증가시킬 수 있고, 핵 프로그램

- 1) 문성준, 김법현, “북한 김정은 집권 이후 핵전략 확장에 따른 한미 ‘맞춤형억제전략’ 신뢰성 제고방안 모색”, 대한정치학회보 30집 3호, 2022, pp.173-198; 김성한,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제 평가” 국제관계연구 제 25권 22호, 2020, pp.33-59.
- 2) 대한민국 대통령실 보도자료, “워싱턴선언”,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press/C8pBYSLx>(검색일: 2023.10.29).
- 3) 박휘락, “한반도 ‘핵균형(Nuclear Balance)’에 대한 탐색적 검토”, 통일전략 제20권 제3호, 2020.
- 4) 박휘락, 앞의 논문, 2020, pp.45-51; 박휘락, “나토 핵공유(nuclear sharing)체제의 현황과 동북아시아 도입에 관한 시론적 분석, 국가전략, 제27권 1호, 2021, pp.103-128.
- 5) 정성장, “왜 우리는 핵보유국이 되어야 하는가”, 2023, (주)메디치미디어; 이근, 신동아 2022.12월호 769호, p.37, <https://shindonga.donga.com/Print?cid=3770896>(검색일: 2023.10.4); 이춘근, “대한민국 핵무장의 논리”, 한반도선진화재단 연구보고서, 2013, pp.13-26.
- 6) “한국 대통령의 사상 첫 ‘자체 핵 보유’ 언급이 갖는 의미”,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1/13/6CORQ7T4NJDYHP72MQQGNMMD4/>(검색일: 2023.10.29).

개발 이후 국내의 우발적인 사고나 정책 결정자의 오해 및 오판으로 인한 전면전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현실주의 중 한 분파인 방어적 현실주의는 어떻게 주변국을 안심시키면서 설득시켜 나가고, 불안과 공포로 인한 정책 결정자의 오판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다. 방어적 현실주의는 주변국의 공포와 불안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한국의 핵 프로그램을 오직 방어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강하게 신호(costly signal)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 정부는 동 목적을 위해서 핵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스스로를 제어(tying-hands)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핵은 오직 방어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no first use)는 점을 법률로 선언하고, 제2타격 능력(second strike capability)을 확보한 후에는 핵 운영에 대해 미국과 함께 협의하는 방안 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또한, 한국 정부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 안정을 위해 미국, EU, 일본, 중국, 러시아 뿐만 아니라, 북한과도 꾸준히 대화해야 한다.

동 논문은 먼저 주요 안보이론인 현실주의, 특히 방어적 현실주의 이론 관련 주장을 검토하고, 그 다음 동 이론이 시사하는 바를 한반도 상황에 적용시킴으로써 한국의 핵 정책 수립 방향을 고민한다. 본 논문은 한국의 핵 정책과 관련한 이론적 토대를 이해하면서도, 동 프로그램 개발 과정 및 그 이후에 어떻게 스스로를 제어하면서 안보 딜레마를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출발하였다.

## II. 이론적 고찰

### 1. 현실주의(Realism)<sup>7)</sup>

동 논문은 먼저 안보이론의 주요 대이론(grand theory)인 현실주의(realism), 특히 방어적 현실주의(defensive realism) 이론에 입각하여 한국의 핵 정책 방향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우리가 이론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론이 여러 현상에 대해 생각하는 틀을 제시함으로써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현 상황을 진단하여, 적절한 처방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고 주장할지 모르나 국제 안보이론은 그간 전쟁 및 평화와 관련된 국가 행동의 원인과 그 패턴을 분석하여,

---

7) 여기에서 현실주의는 현대 현실주의 이론의 가장 근간이 되는 구조적 현실주의(Structural Realism)를 다룬다.

국가 간의 행동을 잘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해 오고 있다.

현실주의는 안보의 주요 연구 패러다임(research paradigm)이다. 안보에 관해 몇 가지 간단한 가정<sup>8)</sup> 하에서 안보와 관련하여 국가의 행동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유용한 지침을 제시한다. 자유주의(liberalism) 나 구성주의(constructivism)도 국제 안보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나, 국가 간 갈등의 원인과 과정에 대해 독자적으로 설명하기 보다는 현실주의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보완적인(complimentary) 측면이 강하다.

현실주의에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생존(survival)이고, 어떤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공격한다고 해서 막아 줄 수 있는 상위의 권위체가 없으므로, 다른 국가와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생존에 중요하고, 적대적인 국가간 힘의 균형이 유지되었을 때 두 국가간 관계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본다.<sup>9)</sup> 왜냐하면 한 국가의 내부질서와는 달리 국제 사회에서는 국가들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세계) 정부가 없기 때문에 한쪽이 일방적으로 강하면 약한 상대방 영토까지 세력을 확장하고 싶은 동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주의자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소간 경쟁이 극심하였던 냉전시에도 양국간 주요 전쟁이 없었던 이유가 양측이 힘의 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으로 파악한다. 국가간 힘의 균형이 국가간 안정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현실주의자들은 핵무기에 대해서도 국가간 힘의 균형을 중요시한다. 핵무기는 재래식 무기보다 그 파괴력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힘의 균형을 위해서 한쪽이 핵무기를 가지면 다른 한쪽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월츠나 미어샤이머 같은 현실주의자들은 정권의 유형(regime type) 같은 국가의 개별적 특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종종 비판 받기도 한다. 동 현실주의자들은 국가가 이성적이라고 가정하고 정권의 유형(예: 민주주의 혹은 비민주주의) 같은 국가적 특성이 국가의 이성적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이란이 자체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여 미국과 유럽국가들의 우려를 증폭시켰을 때도, 월츠는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도 핵무기를 가지는 것이 힘의 균형 논리에 의해서 중동지방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sup>10)</sup> 동 주장은 이란이 이성적 일지는 모르지만 위험하고, 이란이 일단 핵을 가지게 되면 더욱 서방세계에 위협이 될

8) 구조적 현실주의에서는 보통 (1) 국제정치 영역에서는 국가들을 통제할 수 있는 상위의 권위체가 없는 무정부상태(anarchy)이고, (2) 국가의 가장 주요 목적은 생존(survival)이고, (3) 국가는 모두 어느 정도의 공격 능력을 가졌고, (4) 국가의 의도(intentions)는 불확실성이 커서 정확히 알기 힘들고, (5) 국가는 이성적(rational)이라고 가정한다(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2001, Norton).

9) Waltz, Kenneth,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Random House, 1979.

10) Waltz, Kenneth, "Why Iran Should Get the Bomb: Nuclear Balancing Would Mean Stability", *Foreign Affairs*, Vol. 91, No. 4, 2012, pp.2-5.

것이라고 비판받기도 하였다.<sup>11)</sup> 실제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이란을 악의 축의 하나로 지목한 바 있고,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은 이란이 핵을 가지는 것은 세계의 평화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여 이란의 비핵화를 위해 이란과 협상을 벌여, 2015년 이란의 핵 개발을 늦추는 협정을 맺기도 하였다.

현실주의자들은 힘의 균형을 위해서 동맹을 유용한 수단으로 제시(external balancing)하면서도 동맹은 결국 자국의 안보 및 국익을 위하여 맺는 것이므로 동맹이 언제든 파기되어도 특별히 이상할 것은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가 말했듯이 국익 앞에서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는 것이다. 실제로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때 동맹은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 예를 들어 제2차 세계 대전시 독일에 대항하여 싸웠던 미국과 소련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서로 가장 큰 적이 되었고, 반대로 1, 2차 세계 대전시 그렇게 격렬히 싸웠던 영국, 프랑스, 독일은 현재 매우 가까운 우방이 되었다.

요약하자면, 현재 한반도의 현실과 관련하여 현실주의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세 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한다. 첫째, 힘의 균형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필요하고, 힘의 균형이 국가간 긴장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간 관계의 안정을 가져온다. 둘째, 재래식 무기만으로는 핵 무기에 대해 힘의 균형이 불가능하므로 핵 균형(nuclear balance)이 필요하다. 셋째, 동맹이 종종 힘의 균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국익 앞에서 동맹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다. 혹자는 힘의 균형을 향한 국가들의 노력이 안보 딜레마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할지 모른다. 다음에 설명할 방어적 현실주의는 특정한 조건에서 왜 이것이 안보 딜레마를 우려하는 사람들의 걱정보다 덜 문제가 되는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 2. 방어적 현실주의<sup>12)</sup>

방어적 현실주의는 기본적으로 현실주의의 틀 안에서 현실주의의 가정과 대부분의 이론을 수용하고 발전시켰다. 방어적 현실주의는 방어적인 국가들(defensive states) 간 갈등

---

11) Kahl, Colin & Kenneth Waltz, "Iran and the Bomb: Would a Nuclear Iran Make the Middle East More Secure?", *Foreign Affairs*, Vol. 91, No. 5, pp.157-162.

12) 공격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와 방어적 현실주의(defensive realism)은 몇가지 가정 및 주장에 있어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다. 실제로 본문에서 예를 든 공격적 현실주의자인 미어샤이머도 한국의 핵 프로그램 보유가 한반도의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저자는 방어적 현실주의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안보딜레마에 보다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 방어적 현실주의 중심으로 본 논문을 전개하였다.

및 전쟁의 주요 원인을 안보 딜레마에서 찾았다. 자국의 안보를 증가시키는 행위가 다른 국가의 안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고, 자국의 군비 증강의 행위가 역설적으로 자국의 안보를 위협에 처하게 만드는 상황을 안보 딜레마라고 설명한다.<sup>13)</sup> 방어적 현실주의자들은 국가들이 영토 확장이나 현 상태 변경과 같은 욕구나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간의 불안과 공포가 군비경쟁을 일으키고, 이러한 위기 고조 결과 결국 갈등과 전쟁이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동 이론을 한반도 상황에 적용하자면, 한미 동맹은 북한에 비해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북한은 재래식 무기만으로는 한미 동맹의 군사력에 절대 열세 상황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게 되었다. 하지만 북한의 핵 보유는 다시 한국으로 하여금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미국의 전술핵 한반도 배치 등 여러 방법을 통해 힘의 재균형을 맞추게끔 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핵 개발은 안보 딜레마의 위협을 증가시켜 한반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방어적 현실주의자들은 왜 적대하는 양측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안보 딜레마에 덜 위협적이고 어떤 상황에서 양측의 핵 보유가 적대적인 국가간 사이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는지 설명한다.<sup>14)</sup>

방어적 현실주의자들은 공격적인 무기와 방어적인 무기의 구분이 확실하고(offense-defense distinguishability), 방어전략 및 무기가 공격적인 전략 및 무기보다 우월할 때(defense advantage), 방어적인 무기와 전략의 채택이 안보 딜레마의 위협을 줄인다고 주장한다.<sup>15)</sup> 두 적대적인 국가 중 오직 한 국가만이 핵무기를 가질 경우에는 핵무기가 공격적인 무기로 쓰일 수 있어, 한쪽의 핵무기 보유가 다른 한 쪽으로 하여금 핵무기 개발을 유도한다. 왜냐하면 한쪽만이 파괴적인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 그에 적대적인 국가는 생존에 큰 위협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적대하는 두 국가가 모두 핵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하더라도, 양 측 모두 제 2타격 능력(second strike capability)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여전히 양측 모두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선제공격함으로써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다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양측 모두 제2타격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한쪽

13) Jervis, Robert, "Cooperation Under the Security Dilemma", *World Politics*, Vol. 30, No. 2, 1978, pp.167-214.

14) Jervis, *Ibid.* 1978; Glaser, Charles, *Ration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The Logic of Competition and Cooper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0.

15) Jervis, *Ibid.* 1978, pp.186-214; Glaser, *Ibid.* 2010, pp.72-85.

이 핵무기 공격을 받더라도 살아남아서 상대방에 핵 보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측은 치명적인 결과를 직면하게 된다. 이 상황에서는 이성적인 국가들은 핵무기를 공격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오직 상대방의 공격을 억제하는 무기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핵무기는 본질적으로 방어적 성격의 무기<sup>16)</sup>이고, 따라서 양측의 핵무기 보유는 이론적으로 안보딜레마의 위험을 감소시켜야 한다.

2차 세계대전 말과 그 이후의 역사는 동 주장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제시한다. 2차 세계대전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은 일본에 대한 핵 공격이 가능하였다. 그 결과 일본은 핵무기의 압도적인 파괴 능력에 결국 1945년 무조건 항복하게 된다. 또한 2023년 현재 러-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로부터 핵 공격의 위협을 받고 있다. 만약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나 현재의 우크라이나가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제2타격능력(second strike capability)을 가지고 있었다면 미국의 핵무기 사용이나 러시아의 핵 위협은 어려웠을 것이다. 반면 냉전 이후 미국과 소련, 현재의 미국과 러시아는 각각 5,000개 이상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음<sup>17)</sup>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전면전이 없어 왔다. 동 사례들은 대립하는 양측이 핵을 가지고 있고, 제2타격 능력을 보유할 경우 핵무기는 억제의 목적으로만 쓰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군비 증강, 혹은 핵 프로그램 보유는 주변국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현실주의자들이 말하듯이 이것은 다른 국가의 의도의 불확실성(uncertainty about other states' intentions)이 커서 군비 증강의 목적이 자국의 안보 때문인지, 혹은 현 상태를 바꾸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지 알기 힘들기 때문이다. 사실 한 국가가 자국이 현 상태 유지(status quo)를 원하는지, 혹은 자국의 영토 확장 같은 현상 변경을 원하는지 그 의도를 아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국가 지도자들은 국익을 위해 진실을 말하지 않을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 직전 나치 독일도 영토 확장의 의도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길 원하였다. 자국의 침략적인 의도가 드러날 경우 다른 국가들은 이에 대해 미리 대비할 것이고, 이 경우 준비가 안 된 국가들을 침략함으로써 얻게 될 이익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어떤 국가는 다른 국가와 싸울 능력이나 의지가 없더라도 안보 위기 상황에서 전쟁의 의지가 있는 것(resolved)처럼 보이고 싶길 원할 수 있다. 일부 안보 학자들은 한국전쟁 시 미국이 중국의 참전 가능성을 낮게 본 것은 중국이 거짓으로 참전의 위협(bluffing)을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라

16) Glaser, *Ibid.* 2010.

17) Arms Control Association, <https://www.armscontrol.org/factsheets/Nuclearweaponswhohaswhat>(검색일: 2023.10.29).

고 평가한다.

키드(Andrew Kydd) 나 글레이서(Charles Glaser) 같은 방어적 현실주의자들은 이러한 주변국들의 우려와 불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국가가 자신의 이익이나 자율성을 일정 부분 희생하는 방식을 통해 값비싼 신호(costly signals)를 보냄으로써 평화의 의지를 드러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18)</sup> 글레이서(Glaser)는 안보딜레마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국의 선한 의도(benign intentions)를 신호해야 하고, 동 신호가 신뢰받기 위해서는 군비제한(arms control), 방어적 태세(defense emphasis), 일방적 자제(unilateral restraint) 같은 값비싼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9)</sup> 동 학자들은 냉전 시대에 미소간 화해 분위기로 전환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소련이 동유럽 및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해 있던 소련군의 퇴각, 소련의 일방적인 핵무기 감축과 같은 값비싼 신호가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소련이 동유럽에서 세력을 유지하고 공산주의의 세력을 넓히려고 의도했다면 그와 같은 행동이 소련의 팽창주의적 계획을 방해하고 미국과의 대결에 있어서도 불리했을 텐데, 그러한 유화적 제스처를 보낸 것은 소련이 미국과의 대결을 피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도(intentions)를 드러내는 것이었고, 미국의 정책결정자도 동 소련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미소간 화해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기여를 했다는 것이다.

피어론(Fearon)은 정치지도자가 자국의 의도에 관하여 발언하고, 그 발언이 거짓일 경우 나라의 명예와 평판을 훼손했다고 비판받아 선거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동 처벌을 고려하는 정치 지도자는 발언에 신중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비용(audience costs)을 고려한 정치지도자는 거짓으로 상대를 위협하기 힘들기 때문에, 동 비용이 높은 나라의 정치 지도자 발언은 신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sup>20)</sup> 피어론(Fearon) 이나 숄츠(Schultz) 같은 학자들은 특히 민주국가의 신호가 비민주국가의 신호보다 더 신뢰를 받는다고 주장하였다.<sup>21)</sup>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가 공언한 바를 지키지 않으면 자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것이고, 동 여론의 비판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숄츠도 야당의 존재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는 자신의 발언에 더욱 신중할 것이

18) Kydd, Andrew, "Sheep in Sheep's Clothing: Why Security Seekers Do Not Fight Each Other", *Security Studies*, 7:1, 1997, pp.114-155; Glaser, Charles, "The Security Dilemma Revisited", *World Politics*, 51:1, 1997, pp.171-201.

19) Glaser, *op. cit.* 2010, pp.64-68.

20) Fearon, James D, "Signaling Foreign Policy Interests: Tying Hands versus Sinking Cost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41:1, 1998, pp.68-90.

21) Fearon, James D, "Domestic Political Audiences and the Escalation of International Dispute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8:3, pp.577-592; Schultz, Keeneth A., "Domestic Opposition and Signaling in International Crises," 92:4, pp.829-844.



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의 신호가 비민주주의 국가의 신호보다 더 신뢰받는다고 주장하였다.

과연 그러한 신호가 자국의 의도를 드러내는데 얼마나 효과적인 지에 대한 일부 학자들의 반론은 있다.<sup>22)</sup> 예를 들어 국가가 자신의 의도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해 값비싼 신호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동 신호가 자국의 이익을 너무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값비싼 신호(costly signals)에는 양면성이 있다. Kim(2022)는 이를 값비싼 신호의 딜레마(dilemma of costly signals) 라고 부르기도 하였다.<sup>23)</sup> 또한 로사토(Rosato) 는 국가들의 의지는 절대로 알 수 없다고 하기도 하였다.<sup>24)</sup> 하지만 상대방 국가의 의도를 알기 힘들다고 하여도, 상대방 국가의 의도를 알지 못하는 데에서 생기는 주변국들의 공포에 대해서 마냥 손 놓고 무관심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국가가 방어적인 목적으로 자신의 안보를 증가시키고자 할 때에는 자율성을 스스로 제어하고 막대한 비용을 치르면서 그 의도를 드러낼 수 있어야 그 신호에 신뢰성(credibility)이 부여된다.

### Ⅲ. 현실주의 이론과 한국의 핵정책

#### 1.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

현실주의 이론이 한국의 핵 정책에 대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하다. 한국은 북한과의 힘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에서 힘의 균형이 필요한 이유를 두 가지로 요약한 바 있다. 첫째는 국가의 생존을 위함이고 둘째는 두 적대 국가간 관계의 안정을 위해서이다. 이 두 가지 사항을 한반도 상황에 적용해 보면, 첫째, 한국의 생존(survival)을 위해서 남북간 힘의 균형이 필요하다. 국가들을 통제할 수 있는 세계정부 같은 권위체가 없는 상황(anarchy)에서, 국가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자신뿐이고, 국력이 약할

---

22) Weeks, Jessica L. 2008. "Autocratic Audience Costs: Regime Type and Signaling Resolve." *International Organization* 62:01, pp.35-64; Weiss, Jessica Chen. 2013. "Authoritarian Signaling, Mass Audiences, and Nationalist Protest in China." *International Organization* 67 (1): pp.1-35; Downes, Alexander B., and Todd S. Sechser. 2012. "The Illusion of Democratic Credibility." *International Organization* 66 (3): pp.457-89; Kim, Seok Joon, "Doom and Gloom, From Structure to Humand Minds: What Makes a North Korean Nuclear Deal Difficult?," *Political Psychology*, 43:4, 2022, pp.715-730.

23) Kim, Seok Joon, *Ibid.* 2022.

24) Rosato, Sebastian, "The Inscrutable Intentions of Great Power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9, No. 3, 2014/15, pp.48-88.

때에는 언제든지 다른 국가로부터 공격 당할 수 있다. 안보 전문가들은 한국의 자체 핵 프로그램 보다는 다른 수단을 통해서 남북간 힘의 균형이 가능하다고 비판할 수 있다. 첫째, 압도적인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힘의 균형이 가능하거나, 둘째, 미국의 동맹에 의해 남북간 힘의 균형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첫째, 재래식 무기나 방어시스템으로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의 파괴력의 차이를 감안할 때 진실을 호도하는 것일 수 있다. 우리 국방부가 핵에 버금가는 위력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현무-5 미사일은 탄두 중량이 고작 8t을 넘는 수준인 반면, 북한이 2017년 9월에 실험한 수소폭탄의 위력이 100~300kt에 달한다고 평가되고 있다.<sup>25)</sup> 1 킬로톤은 그 폭발력이 1,000톤에 해당하며, 2차 대전 당시, 수천 문의 포를 동원해서 쉬지 않고 수일간 포사격을 계속해야 다 쓸 수 있는 양이 1킬로톤 정도라고 한다.<sup>26)</sup> 우리가 재래식 무기에 있어서 북한을 압도할 수 있다고 하지만, 북한의 핵폭탄의 위력을 감안할 때 핵무기 없이 북한과의 힘의 균형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한국의 킬체인<sup>27)</sup>과 같은 공격적인 시스템이 북핵에 효과적인 대응체계가 되기도 힘들다. 북한은 이동식 발사대 거치 후 5분 이내 사격이 가능한 고체연료용 북극성 2호 등의 단거리 미사일을 개발했기 때문에, 북한의 핵 공격시 그것을 단시간 내 공격 태세를 알아내고 준비하여 공중에서 요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sup>28)</sup> 즉 한국군이 3축(3K) 체계라는 명칭으로 선제타격(Kill Chain), 발사되면 공중요격(한국형 미사일 방어 KAMD), 재래식 전력으로 응징보복태세 강화(한국형 대량응징 보복 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로 자체 방어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sup>29)</sup>

둘째, 미국의 확장억제에 의한 힘의 균형은 중·장기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재 많은 국내 안보 전문가들은 한국의 자체 핵 프로그램 개발을 비현실적으로 보고 북한의 핵에 맞서 미국의 확장억제에 의지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도 인정하다시피 북한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완료함으로써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credibility)는 약해지고 있다. 북한은 이미 2017년 화성 15형을 시험 발사하여 미 본토 공격능력을 보여 주었고, 같은 해 9월에는 수소폭탄 시험에 성공한 바 있다. 북한은 2022년 2월 이후에도 남아메리카 남부와 남극을 제외한 지구상 전 대륙을 그 사정

25) 정성장, 위키 책, 2023, pp.22-23.

26) 이춘근, 앞의 논문, 2013, p.16.

27) 킬체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지휘·발사·지원체계, 이동식 발사대 등 핵심표적을 신속·정확하게 탐지하여 사용 징후가 명백한 경우 발사 전에 제거하는 공격체계”이다(2022 국방백서, p.57).

28) 박휘락, 위의 논문, 2021, p.115.

29) 박휘락, 위의 논문, 2021, p.115.

거리에 두는 화성-17이라고 불리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계속 시험 발사 하고 있다.<sup>30)</sup> 북한은 2023년 7월에는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동 미사일은 미국 본토 전역에 닿을 수 있는 1만 5000km 가량 비행이 가능하다고 추정되었다.<sup>31)</sup> 또한,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이미 개발하였거나 개발에 거의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sup>32)</sup> 동 미사일은 이동 중에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탐지가 더욱 어려워졌다. 북한의 핵운용이 점점 더 발달하면서, 북한은 제 2 타격 능력(second strike capability)을 갖추어 가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모든 핵시설에 대한 리스트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설령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이동 중인 기차나 잠수함로부터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국은 그에 대해 완벽하게 방어하기 어려울 것이고, 핵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떨어졌을 경우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자국민을 희생시켜서 동맹국을 보호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어렵다.

또한 미국 대통령의 신념에 따라 한미 동맹의 중요도가 바뀔 수도 있다. 트럼프 정부는 일부 국제적 고립주의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자국의 부담을 줄이고자 한국의 방위비 분담을 기존 10억 달러 미만에서 5배 수준인 50억 달러로 올릴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sup>33)</sup>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을 ‘지나치게 이용한다(a major abuser)’라며 중국과 함께 미국을 ‘벗겨먹고(rip us off)’있다고”말한 적도 있다.<sup>34)</sup> 동 발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국에 대한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내었다. 최근의 미국 여론조사(시카고 국제문제협회의 2023년 10월 4일 설문조사) 를 보면 북한의 한국 공격에 대해 미국의 개입에 대한 찬성 지지율이 하락 추세(작년 63%에서 올해는 50%)이며, 특히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설문 응답자의 46% 만이 미국의 우리나라 방어에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sup>35)</sup> 미국 공화당 지지층은 동맹국의 보호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며, 북한의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한국 보호에 대해 더욱 소극적이 될 가능성이

30) “대포동에서 화성-17까지, 북한 미사일 개발사...남미 일부과 남극 제외한 전 대륙 사정거리”, 『남북경협뉴스』 온라인, <http://www.snk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972>(검색일: 2023.10.29).

31) “북한, ICBM 추정 미사일 발사...‘미 정찰기 격추’경고 직후”, 『한겨레』 온라인,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099770.html>(검색일: 2023.10.29).

32) “북한, 세계 최초로 저수지서 SLBM 발사...우리 군 김새 못 됐다”, 『한겨레』 온라인,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062038.html>(검색일: 2023.10.29).

33) “트럼프 한국이 제안한 방위비분담금 내가 거절...큰 비율 내야”, 『한겨레』 온라인,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41324.html](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41324.html)(검색일: 2023.10.29).

34) “방위비분담금: 트럼프, 한국은 미국을 ‘벗겨 먹고 있다’발언의 실체는?”, 『BBS NEWS 코리아』 온라인, <https://www.bbc.com/korean/news-49834765>(검색일: 2023.10.29).

35) “北이 한국 침공하면 지켜줘야하나?” 미국인에 물어보니...절반만 ‘YES’”,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https://www.fnnews.com/news/202310050837574407>(검색일: 2023.10.29).

크다. 미국인들의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가 여전히 높고, 실령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이 한국의 안보에 대해 소극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다. 미국 내 공화당 지지자들은 동맹국의 안보를 위한 미국의 개입에 대한 지지를 유보하는 경향이 있고, 트럼프 행정부 당시 동맹국들에 대한 강한 방위비 분담 압박을 보면, 미 공화당 정부에서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가 더욱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요약하자면, 압도적인 재래식 무기만으로는 핵을 가진 북한에 대해 힘의 균형이 불가능하고,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가 더욱 줄어들어다는 사실은 힘의 균형을 위해서는 한국의 독자적 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 2. 한반도의 안정

앞에서 현실주의 이론은 핵 균형(nuclear balance)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적대적인 국가간 관계의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현실주의자들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1990년대 초 소련이 붕괴하기 전까지 미국과 소련 사이에 주요 전쟁이 없었던 것은 미국과 소련간 힘의 균형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미국과 소련은 양측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고, 또한 양측 모두 제2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쪽이 핵 공격을 받더라도 살아 남아서 상대방에게 보복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양측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양측 모두 치명적인 타격을 받기 때문에(mutual assured destruction), 이를 아는 양측은 전면전을 치를 수 없었고 비교적 안정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현실주의 이론은 동일한 논리로 한반도에서 힘의 균형, 더 구체적으로는 핵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피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실제로 우리의 상식과 반할 수 있다. 미어샤이머는 2023년 8월 통일부가 주최한 한반도 국제포럼에서 북한이 핵을 가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북한 핵 보유가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는 궁극적인 힘이라고 보고 있다”고 하면서 “한반도에서 안정성이 더 커질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자체 핵보유”라고 주장하였다.<sup>36)</sup> 이는 현실주의 이론에 따르면 전혀 놀라운 발언이 아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가짐으로 인해서 잠재적인 적으로부터

36) “미어샤이머 북핵 때문에 한반도서 미중 간 직접 대립 없어”, 『미디어펜』 온라인, <https://www.mediafen.com/news/view/850369>(검색일: 2023.10.29).

의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고, 따라서 굳이 북한을 돕기 위한 중국의 개입이 불필요하며, 결과적으로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이 직접적으로 부딪힐 가능성이 줄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미국과 압도적인 힘의 격차를 핵무기 보유를 통해 억지력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다. 비슷한 논리로 힘의 균형을 위해서는 한국도 핵을 가져야 한다. 핵자는 한국의 자체 핵프로그램 보유가 남북간 군비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전쟁의 위험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할 수 있다. 하지만 동 우려는 핵무기의 본질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즉, 본질적으로 양측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제2타격 능력을 보유하는 한 핵무기는 공격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의 자체 핵 프로그램의 보유는 한반도에서의 안보딜레마를 증가시키기 보다는 한반도 긴장을 오히려 줄일 것이다.

물론 모두가 미어샤이머의 의견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같은 포럼에서 미어샤이머의 발언은 많은 전문가의 비판에 부딪히기도 했다. 예를 들어 카네기 국제평화재단(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있는 안킷 판다(Ankit Panda)는 한국이 자체 핵 프로그램을 가질 경우 한반도에서 재래식 무기의 충돌이 핵전쟁으로 확대될 위험성이 있으며, 두 적대 국가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양측에 안정성, 혹은 평화가 오지는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미국, 한국, 일본이 억지뿐만 아니라 위험을 줄이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37)</sup> 동 포럼에서 전 주북한 독일 대사였던 토마스 샤퍼(Thomas Schafer) 역시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 일본 및 여타 민주국가 및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한국이 핵무기 없이 국제 사회의 지지나 협력만으로 한반도의 안정을 가져올지에 대해서 현실주의 이론은 비판적이다. 현실주의 이론의 기본 가정으로 돌아가자면 국제시스템은 정부 위의 정부가 없는 상태(anarchy)이기 때문에 누구도 북한의 공격에 대해 한국의 안보를 책임지지 않는다. 북한이 핵무기와 그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 체계를 점점 발전시켜 가면서 북한은 한국에 대해 점차 무리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핵이 없는 한국은 미국의 억지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미국 정부는 동맹국의 안보에 자국의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 점점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자국의 안보가 위협을 받고 동맹국의 보호를 위한 비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희생을 무릎 쓰고 동맹국을 보호하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한국이 자체 핵 프로그램을 가지게 되면 북한

37) "Mearsheimer: North Korean nukes a 'force for stability' on Korean Peninsula", 『NK News』 온라인, <https://www.nknews.org/2023/08/mearsheimer-north-korean-nukes-a-force-for-stability-on-korean-peninsula/>(검색일: 2023.10.29).

도 군사적 및 비군사적 도발을 자제할 수 밖에 없다. 즉, 핵전쟁의 위험이 양측을 자제하도록 하여 오히려 한반도의 안정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 3. 안보 딜레마와 방어적 신호

#### 1) 안보딜레마

현실주의 이론가들은 힘의 균형이 국가 관계의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대적인 국가들 사이에 힘의 균형을 맞추고자 자국의 안보를 증가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군비경쟁과 안보 딜레마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인정한다.<sup>38)</sup> 한국의 핵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우려하는 안보 전문가들은 이것이 북한과의 무한 군비경쟁에 빠지게 만들 수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의 핵 프로그램 개발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 체계의 발전을 이루고 있다. 즉, 우리가 자체 핵 프로그램 개발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체계 개발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일부 전문가는 한국이 일단 핵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하게 되면 핵의 우위(nuclear superiority)를 확보하기 위해 양측간에 무한 경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비판할지 모른다. 하지만, 설령 북측과 우리나라가 핵과 그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을 위해 경쟁한다고 하더라도 양측이 제2타격 능력을 갖추게 되면 핵무기에 있어서 우위는 큰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 한쪽이 핵탄두를 1,000개를 확보하고 다른 한쪽이 500개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양측 모두 제2타격 능력을 보유하는 한, 일단 핵전쟁이 시작되면 양측 모두 공멸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양측이 다 이성적(rational)이라면 핵전쟁을 시작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현재 미국과 중국간의 관계를 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2023년 6월 현재 미국은 5,244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41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sup>39)</sup> 핵탄두의 보유양에 있어서는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지만, 양측은 일단 핵전쟁이 일어나면 공멸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양측간 전면전이 일어나리라고 보는 것은 힘들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핵무기는 상대방을 억지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양측이 모두 제2타격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 본질적으로 방어적인 무기 체계이기 때문이다.

자체 핵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모두 이성적이고, 한 국가가 핵 무기를 사용하는 순간 양측이 모두 공멸할 것을 알고 있다면 안보 딜레마의 위험성은 낮아져야 한

38) Jervis, *op. cit.* 1978.

39) Arms Control Association, <https://www.armscontrol.org/factsheets/Nuclearweaponswhohaswhat>(검색일: 2023.10.29).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이성적(rationality)이라는 가정에서 벗어나서, 핵 보유국 주변 국가의 불안과 공포가 커지는 상황에서, 우발적인 사고나 오해 및 오판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한국이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면 오해와 오판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의 불안과 염려를 줄이고 우리가 오직 방어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의지를 주변국에게 알리고 설득해 나가야 한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그래서 국제관계 분야에서의 신호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자국의 이익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강력한 신호(costly signal)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2) 자국의 선제공격 금지(No First Use) 선언

일부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무기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선제 타격력 또는 예방 타격이 유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40)</sup> 북한이 핵무기 공격을 시도할 때 한국이 미리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북한의 선제 핵무기 공격이 어려울 것이라는 논리이다. 그렇다면 북한 핵무기 공격 시도를 미리 알아서 우리의 선제공격을 결정하는 정확한 시점은 언제가 되어야 하는가? 북한 지도부가 극비리에 진행할 회의에서 핵 사용을 결정할 시점인가? 아니면 실제로 핵 공격 준비를 개시할 시점인가? 하지만, 북한 지도부의 결정은 최고위층 극소수간에 극비리에 진행될 것이고, 일단 핵무기 사용을 결정하면, 준비에서 발사 시간까지의 시간이 고체연료 미사일 사용시 고작 5분 이내이기 때문에, 한국이 1) 북한의 선제공격 계획을 사전에 정확히 알아서, 2) 빠른 시간(예: 5분) 내에 대응하기에는 극히 힘든 것이다. 2023년 10월 7일 중동지역에서 가장 광범위한 첩보망을 구축하고 자금력을 갖춘 이스라엘 양대 정보기관인 신베타와 모사드, 그리고 미국의 정보기관 조차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습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은, 적대적인 공격을 사전에 알아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보여 준다.

비슷한 맥락에서 북한의 임박한 선제공격을 정확히 예측하고 미리 공격(preemptive strike)하는 것이 극히 힘든 상황에서, 핵을 사용한 선제 공격이 허용된다면 상대가 먼저 선제공격을 감행하기 전에 상대를 먼저 공격해야 한다는 조급함에서 오는 정책 결정자의 오판과 실수가 핵전쟁의 위기를 증대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공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 시스템의 재정비나 재배치, 테스트 등을 목적으로 핵탄두를 이동할 수 있는데, 이것이 진짜 핵무기를 사용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인지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한쪽이 먼저 공격을 해야 한다

40) 박휘락, 앞의 논문, 2020, pp.57-58.

는 조급함 때문에 선제공격을 하게 된다면 양측이 공멸할 수 있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1983년 9월 26일, 미국과 소련간 냉전이 한창일 때, 미국의 미사일 기지를 감시하던 소련의 위성으로부터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 5기가 발사되었다는 잘못된 정보(false alarm)를 듣고도 종합적인 판단으로 소련의 핵공격을 막은 당시 페트로프 중령의 이야기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sup>41)</sup> 동 사건은 적국의 핵 미사일 발사에 대한 감시체계가 완벽하지 않으며, 오판으로 인한 핵전쟁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제 핵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보가 완벽하지 않은데, 핵 미사일을 사전에 짧은 시간 내에 완벽하게 탐지하는 것을 더더욱 더 불확실할 것이며, 인간과 기계의 결함 때문에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조급한 상황에서 올 수 있는 정책결정자의 오해와 오판을 줄이기 위해서 한국이 핵무기의 임의적인 무력 사용을 스스로, 그리고 강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미래의 자율성을 스스로 제한(tying-hands)하는 것이 양측의 오판과 실수를 줄이는 한 가지 방법이다. 즉, 한국이 먼저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No First Use: NFU)을 법률로 명시하여, 주변국들에게 동 핵무기를 오직 방어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주변국의 불안과 염려를 완화시키기 위해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도자가 단순히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왜냐하면 지도자의 선언이 정치적인 수사로 여겨질 수 있으며, 지도자의 말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cheap talk)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이 핵을 오직 방어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지도자나 정권이 바뀌더라도 쉽게 바꿀 수 없는 법률로 명문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 국가에서 법률을 바꾸는 것은 보통 여당과 야당이 합의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법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일단 법률로 명문화 되면 이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 국가의 신호는 보통 신뢰받는 경향이 있다.<sup>42)</sup>

일부 학자들은 선제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핵무기 사용에 대한 신뢰를 줄인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박기철과 주재우(2022)는 “미국의 NFU 채택이 ... 국제사회에 대한 신뢰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잠재적 적국으로 하여금 미국의 전략이 수세적으로 변했다는 오판을 야기”할 수 있고, “동맹국들로 하여금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안보 딜레마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로 선제공격하지 않겠다는 No First Use의 명문화는 1) 잘못된 정보

41) “냉전 시기 핵 전쟁 막아낸 영웅 페트로프, 77세로 사망”, 『중앙일보』 온라인,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947846#home>(검색일: 2023.10.29).

42) Fearon, *op. cit.* 1994, Schultz, *op. cit.* 1998.



(false alarm) 등의 오판으로 생길 수 있는 전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일종의 스스로의 손을 묶는 신호(hands-tying signal)이다. 따라서 한국이 선제공격 금지 선언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안보 딜레마의 위험을 줄이고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지도자의 오판에 제동을 걸 수 있어야 한다.

혹자는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선언하면 북한의 선제공격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기차나 잠수함과 같은 이동수단을 이용하여 핵을 이동할 수 있고, 우리는 북한의 핵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모든 정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북한의 선제공격에 대한 정보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북의 모든 핵 시설을 파괴할 수 없다. 양측이 제2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어느 한쪽이 선제공격을 할 경우, 다른 한쪽도 핵으로 보복하게 된다면, 선제공격이 큰 의미가 없게 된다. 왜냐하면 한쪽이 선제 공격을 하더라도 상대방에서 똑같이 핵 보복을 할 것이고, 핵 전쟁이 일어나면 결국 양측 모두 공멸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북한이 선제공격을 할지에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가능성이 낮고, 선제공격으로 인해 공격하는 측이 얼마나 이익을 볼지도 불분명하다. 이에 반해 선제공격을 하지 않겠다(no first use)고 선언하고 실질적으로 이를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비교적 확실하다. 즉 안보 딜레마 감소로 인한 한반도 긴장 완화 및 안정성 증대이다.

이는 북한이 2022년 핵무력정책법에서 핵선제공격의 가능성을 시사할 때 조차 동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북한이 2022.9.8.일 채택한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관하여’ 6조에서는 “① 북한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 살육무기(대량살상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공격이 강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국가의 중요 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북한이 선제공격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최악의 경우, 북한이 선제공격을 하더라도 우리가 제2타격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나라는 북에 대해 핵보복으로 응징할 수 있다. 누가 먼저 핵공격을 하느냐는 핵무기의 파괴력을 감안하였을 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양측 모두 상대방의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의식해 오판에 의한 핵전쟁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안보 딜레마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내가 먼저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reassurance) 시키는 것이 핵심이고, 상대방을 안심시키기 위한 방법은 상호성(reciprocity)에 있지 않다. 상대방이 공격적으로 나오더라도 내 스스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상대방의 공포를 줄여서 안보 딜레마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 3) 미국 및 주변국과의 대화

한국이 핵 사용 지침 마련 및 운용에 대해 미국과 협의하는 것도 우리의 핵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미국의 우려를 줄일 수 있다. 한국의 자체 핵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미국의 주류 정치가 및 학계에서는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핵 사용의 원칙이나 지침을 마련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협의를 제도화한다면 미국의 주류 정치가 들이나 전문가들을 설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미국과 협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 결정자와 안보 전문가 및 학자들이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이다. 한국의 핵 지침 마련 및 운용에 대해 미국과 협의하는 것이 우리의 자주권 및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이 방어론적 현실주의자들이 말하는 신뢰받을 수 있는 값비싼 신호(costly signals)의 핵심이다. 한국이 스스로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지침을 정하고 운용할 수 있지만, 한국 스스로의 자율성을 제한함으로써 한국의 핵 사용이 오직 방어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의지를 최소한 우리의 우방국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핵지침 마련 및 운용에 대한 미국과의 협의는 한국의 오관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고 주변국에 의도치 않은 위협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미리 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자체 핵 프로그램을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주변국들과 대화와 설득의 단절을 의미해서는 안된다. 한국이 자체 핵 프로그램을 가진다고 할 경우 중국은 한국에 대해 경제 제재를 가하려고 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한국이 자체 핵 프로그램을 가지게 되면 남과 북이 핵 균형을 이루게 되어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의 여지가 줄어든다는 점을 들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에 우려하는 중국을 계속 설득해야 한다.

또한 북한과의 대화도 계속되어야 한다. 한국의 핵 개발이 북한과의 힘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지 북한을 압살하려고 한다든지 북한의 정권을 교체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알리고 계속 대화해 나가야 한다. 일부 정치가 및 전문가들은 북한이 억지의 대상이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이 자체 핵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도 북한과 힘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북한의 잠재적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서이지, 북한 정권을 무력으로 교체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한국의 의도를 드러냄으로써,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 혹자는 한국의 핵 프로그램 개발이 북한을 억지하려고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계속한다는 것이 모순이라고 비판할 수 있으나, 앞서 여러 차례 언급했다시피 한국의 핵 프로그램은 오직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의 핵 프로그램 개발 중에도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하며, 일단 핵 프로그램이 완성되더라도 서

로의 불안과 염려를 누그러뜨리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양측의 대화 및 교류는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한국이 핵 프로그램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북한과 핵 균형 (nuclear balance)을 이루게 되면 동북아시아에서 더 이상의 핵무기 등 군비경쟁 등을 막고, 주변국, 특히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의 불안과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을 포함한 6자 협의회를 마련하여 우리나라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상황 등을 동시에 감시하기 위한 새로운 목적의 6자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 IV. 한국 핵정책, 대안의 이익과 비용

한국 정부가 핵 정책을 결정할 때 자체 핵 프로그램을 보유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이익과 비용 및 그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실주의 이론은 한국이 자체 핵 프로그램을 가질 경우의 이익(생존의 가능성 증대, 한반도 안정)과, 그렇지 않았을 때의 비용(생존에 위협, 자주 국방은 불가능)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있는 설명을 제시하고 있으나, 자체 핵 프로그램 보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을 하지 않는다. 이런 점 때문에 한국의 자체 핵 프로그램 보유가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표 1〉 한국 핵 정책 대안들의 이익과 비용

	한국이 단독 핵 프로그램 가질 경우	한국이 단독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경우
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존과 자주 국방 가능</li> <li>• 남북간 힘의 균형으로 한반도 정세 안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사회 제재에 대한 불안 불필요</li> <li>• 주변국에 불안과 위협감을 증가시키지 않음.</li> </ul>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유럽, 일본 등 우방국의 반발</li> <li>• 중국의 경제 제재</li> <li>• 북한의 반발로 단기적으로는 한반도 위기 고조</li> <li>• 다른 국가의 핵프로그램 개발욕구 자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존 및 안보에 심각한 위협</li> <li>• 자주 국방은 불가능</li> </ul>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핵 프로그램 보유 주장에 대한 첫 번째 비판이자 관련 비용은 미국이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므로 한국의 핵 보유가 현실적이지 못하고, 미국이 반대

할 경우 핵 프로그램 보유의 비용이 막대할 것이라는 비판이다. 즉, 한국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반대하는 안보 전문가는 미국과의 동맹 훼손, 미국 및 서방국가로부터의 경제 제재 등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주류 정치가 및 전문가들이 한국의 단독 핵 프로그램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사실이다. 현 바이든 정부의 백악관과 국방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면서, “자체 핵 보유는 물론이고 전술핵 배치도 고려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sup>43)</sup>

한국의 자체 핵 보유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미국 정계의 주류 여론이기는 하나, 과거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지 않던 시절과 지금의 미국 전문가 및 일반 시민의 여론에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더그 밴도우 케이토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023년 한국의 핵무장 여론에 대한 VOA 논평 요청에 그간 한국의 독자적인 핵프로그램 개발과 한미동맹은 양립할 수 없다고 인식하였으나, 최근 “이론적으로는 양립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사고의 변화”가 감지된다고 하였다.<sup>44)</sup> 실제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미국의 방위비 분담 부담을 언급하면서 한국 및 일본의 핵무장에 대해서 용인한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장으로 우리나라의 안보가 심히 훼손된다는 점을 들어 한국의 핵무장의 정당성에 대해서 미국과 서방국가 및 주변국들을 설득해 나간다면, 미국이 우방국인 한국을 대상으로 장기적이고 심각한 수준의 경제 제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미국 여론조사에서도 한국의 자체 핵 프로그램 보유에 대한 찬성이 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아일보와 국가보훈처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미국인 1000명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한국의 자체 핵 보유에 찬성하는 비율은 41.4%로 반대 비율 (31.5%)보다 거의 10% 포인트 높았다.<sup>45)</sup> 동 여론 결과는 한국의 핵 프로그램 보유가 미 국민의 반대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예상보다는 미국의 여론이 호의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유럽 및 일본 등 국제사회의 반발도 예상된다. 한국의 핵 프로그램

43) “‘韓핵무장’에 선 또 선 곳은 美… 확장억제 인식 ‘미묘한 간극’”, 『중앙일보』 온라인,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3476#home>(검색일: 2023.10.29).

44) 원문의 표현에는 “For a very long time, for decades I think that the perception as related to South Korea was one in which South Korea was required to make a choice between the alliance and pursuit of an autonomous nuclear weapons capability. But recent trends in the debates seem to suggest that there has begun to be a way of thinking that might eventually allow for the coexistence in theory of the alliance with an autonomous South Korean nuclear capability”으로 되어 있음. “미전문가들 미국 정부 ‘한국 핵무장 여론’ 압박 받아...워싱턴 주류 인식은 핵무장 반대”, 『VOA』 온라인, <https://www.voakorea.com/a/6941008.html>(검색일: 2023.10.29).

45) “‘韓 자체 핵보유’ 한국인 64%-미국인 41% 찬성”, 『동아일보』 온라인,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30331/118609132/1>(검색일: 2023.10.29.); 정성장, 앞의 책, 2023, p.141.

개발을 비판하는 전문가들은 국제법 위반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경제적 제재로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고립되어 우리의 경제가 북한처럼 폐쇄경제가 될 것을 우려 한다. 국제사회의 반발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 비판은 미국이나 유럽이 북한에 의해 생존을 위협받는 같은 민주 국가에 대한 지지나 신뢰를 과소 평가하는 측면이 있다. 인도나 파키스탄의 사례를 보더라도 자체 핵 프로그램의 개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비교적 단기간에 그쳤다. 북한조차도 핵 프로그램 개발 초기에는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유엔의 제재를 받기도 하였지만, 핵 무력을 완성하였다고 주장한 지 채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북한은 벌써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난 후 북한은 2019년 6월 중국 시진핑과 평양에서 정상 회담을 갖고 양국간의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있다. 또한 김정은은 2023년 9월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만나 양국간 군사, 기술 협력 등에 관해 논의하는 등 양국간 협력관계를 과시하였다.<sup>46)</sup> 한국의 핵 프로그램 개발이 일정기간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수 있고, 수출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이 중국 등으로부터 경제제재를 받을 경우 막대한 타격을 받을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이러한 제재가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않을 것이고, 현실주의 이론은 경제 제재라는 손실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안보의 문제에 있어, 생존이 국가의 주요 목표임을 상기시키고 있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탈퇴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생존을 위한 핵 프로그램 개발이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 학계에서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대릴 프레스 교수 등은 한국의 NPT 탈퇴가 정당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기고문을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하였다. 미국의 제니퍼 린드, 대릴 프레스 교수는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한국은 자체 핵폭탄을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자국의 지상 이익(supreme interests)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 사태시 NPT를 탈퇴할 수 있다’는 NPT 10조를 근거로 한국의 핵 보유는 합법적이고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sup>47)</sup> 그들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국제사회에서 모범 국가로 남기 위해 힘의 균형을 포기하고, 자국의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현실주의 이론에서는 이성적(rational)인 행동으로 보기 힘들다. 하지만 미국을 먼저 설득시키고 미국과 함께 민주 우방국가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우방국의 반발로 생길 수 있는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46) “Kim Jong Un and Vladimir Putin meet for talks in Russia”, 『BBC News』 온라인, <https://www.bbc.com/news/world-asia-66787449>(검색일: 2023.10.29).

47) “미 정치학자 “한국 핵무기 보유 결정하면 미국은 지지해야””, 『연합뉴스』 온라인, <https://www.yna.co.kr/view/AKR20211009000300071>(검색일: 2023.10.29).

한국의 자체 핵프로그램 보유로 인해 중국으로부터의 반발 및 제재의 영향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사드 미사일 배치만으로 우리나라에 경제제재를 한 바 있다. 사드 미사일보다 더욱 위협한 핵 개발에 대해 중국은 반대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핵보유로 미국의 확장억제의 필요가 줄어든다는 점을 들어 중국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 다만 중단기로 예상되는 강력한 경제제재에 대해서는 대비해야 한다.

## V. 결론 및 정책 제언

본 논문은 국제안보이론 중 가장 널리 알려진 현실주의 이론을 기반으로 한국의 핵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살펴 보았다. 현실주의 이론, 특히 방어적 현실주의에서는 1) 생존을 위해서는 상대방 국가의 힘에 맞선 균형이 중요하며, 2) 양 측이 모두 제2 타격 능력을 갖춘 상황에서는 핵이 실질적으로 방어적인 무기 (defensive weapon)여서, 보통 사람들의 우려와는 달리 양측의 핵 보유가 두 적대적인 국가 사이에 안정을 가져오며, 3) 안보 딜레마의 위협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국의 방어적인 의도를 잘 (credibly) 전달할 수 있는 값비싼 신호(costly signals)를 보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동 현실주의 이론에 따르면 한국은 1) 북한과의 핵 균형을 위해 자체 핵 프로그램을 가져야 하고, 2) 이러한 핵 프로그램이 북한 정권을 교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주변국에 잘 인식시켜야 하며, 3) 핵 프로그램 개발 및 보유가 방어적인 목적임을 드러내기 위해 스스로의 자율성을 희생하더라도 선제공격 금지(No First Use)와 같은 실질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동 현실주의 이론이 한국의 핵정책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한국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현 정부에서 일본 수준의 핵개발 능력 (breakout capability)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그간 미사일 탄두 중량 및 사거리에 제한을 두는 한미간 미사일 지침에서의 동 제한들을 완전히 없애는데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sup>48)</sup> 현 정부에서는 고농축 우라늄 생산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금지하는 한미원자력 협정을 최소한 미국-일본 수준으로 개정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급선무이다.<sup>49)</sup> 둘째, 미국에 한국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호의적인 행

48) “핵무기급 미사일 이미 개발... 족쇄 풀린 한국, 北 추월한다[박용한 배틀그라운드]”, 『중앙일보』 온라인,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69742#home>(검색일: 2023.10.29).

49) 정성장, 앞의 책, 2023, p.127.

정부가 들어설 경우를 대비해 지속적으로 한국의 기술적 역량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 2023년 4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에서의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 연설에서 “한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는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sup>50)</sup> 이병철은 핵무기를 비밀리에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비무기급 핵분열성 물질을 지남으로써 기술적 해징 능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sup>51)</sup> 사용후 연료에서 핵무기에 사용할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위한 대규모 재처리 시설 등과 관련한 기술 확보, 연구진 확충이 필요하다. 셋째, 유럽·일본 등 자유 우방국에 대해 한국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주변국의 불안과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직 방어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고 선언하고 관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오판과 오해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말되 지속적인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한국의 핵 프로그램 보유의 궁극적인 목적이 한반도 정세 안정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핵 무기가 방어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속적인 남북 양자간 또는 관련 국가들을 포함하는 다자간 대화 창구 확보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김성한,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제 평가,” 『국제관계연구』 25권 22호, 2020.  
대한민국 국방부, 2022, 국방백서.  
대한민국 대통령실 보도자료, “워싱턴선언”,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press/C8pBYSLx> (검색일: 2023.10.29).  
문성준, 김법헌, “북한 김정은 집권 이후 핵전략 확장에 따른 한미 ‘맞춤형억제전략’ 신뢰성 제고방안 모색,” 『대한정치학회보』, 30집 3호, 대한정치학회보, 2022.  
박휘락, “한반도 ‘핵균형(Nuclear Balance)’에 대한 탐색적 검토,” 『통일전략』, 20권 3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20.  
박휘락, “나토 ‘핵공유(nuclear sharing)’체제의 현황과 동북아시아 도입에 관한 시론적 분석,” 『국가전략』, 27권 1호, 세종연구소, 2021.  
이병철, 『북한의 핵전략 변화가 한국에 주는 함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 시리즈 63, 경남대학교 출판부, 2023.

50) “윤, 미국서 “마음먹으면 1년내 핵무장”...현실 가능성 있다”, 『한겨레』 온라인,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090109.html>(검색일: 2023.10.29).

51) 이병철, 『북한의 핵전략 변화가 한국에 주는 함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 시리즈 63, 2023, 경남대학교 출판부.

이춘근, “대한민국 핵무장의 논리”, 한반도선진화재단 연구보고서, 2013.  
정성장, 『왜 우리는 핵보유국이 되어야 하는가』, 메디치미디어, 2023.

Arms Control Association, <https://www.armscontrol.org/factsheets/Nuclearweaponswhohaswhat>(검색일: 2023.10.29).

Downes, Alexander B., and Todd S. Sechser. “The Illusion of Democratic Credibility.” *International Organization* 66(3), 2012.

Fearon, James D, “Domestic Political Audiences and the Escalation of International Dispute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8(3), 1994.

Fearon, James D, “Signaling Foreign Policy Interests: Tying Hands versus Sinking Cost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41(1), 1998.

Glaser, Charles, “The Security Dilemma Revisited” *World Politics*, 51(1), 1997.

Glaser, Charles, *Ration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The Logic of Competition and Cooper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0.

Jervis, Robert, “Cooperation Under the Security Dilemma” *World Politics*, 30(2), 1978.

Kahl, Colin & Kenneth Waltz, “Iran and the Bomb: Would a Nuclear Iran Make the Middle East More Secure?” *Foreign Affairs*, 91(5), 2012.

Kydd, Andrew, “Sheep in Sheep’s Clothing: Why Security Seekers Do Not Fight Each Other” *Security Studies*, 7(1), 1997.

Mearsheimer, John,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orton, 2001.

Rosato, Sebastian, “The Inscrutable Intentions of Great Powers” *International Security*, 39 (3), 2014.

Schultz, Keeneth A., “Domestic Opposition and Signaling in International Crise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2(4), 1998.

Waltz, Kenneth,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Random House, 1979.

Waltz, Kenneth, “Why Iran Should Get the Bomb: Nuclear Balancing Would Mean Stability” *Foreign Affairs*, 91(4), 2012.

Weeks, Jessica L., “Autocratic Audience Costs: Regime Type and Signaling Resolve” *International Organization*, 62(01), 2008.

Weiss, Jessica Chen, “Authoritarian Signaling, Mass Audiences, and Nationalist Protest in China” *International Organization*, 67(1), 2013.

Kim, Seok Joon, “Doom and Gloom, From Structure to Humand Minds: What Makes a North Korean Nuclear Deal Difficult?” *Political Psychology*, 43(4), 2022.

남북경협뉴스, “대포동에서 화성-17까지, 북한 미사일 개발사...남미 일부과 남극 제외한 전 대륙 사정 거리”, <http://www.snk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972>(검색일: 2023.10.29).

동아일보, “‘韓 자체 핵보유’ 한국인 64%-미국인 41% 찬성”,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30331/118609132/1>(검색일: 2023.10.29).

미디어펜, “미어샤이며 ”북핵 때문에 한반도서 미중 간 직접 대립 없어”, <https://www.mediapen.com/>



한국의 핵 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함의: 방어적 현실주의 (Defensive Realism) 중심으로 (김석준)

news/view/850369(검색일: 2023.10.29).

연합뉴스, “미 정치학자 “한국 핵무기 보유 결정하면 미국은 지지해야””, <https://www.yna.co.kr/view/AKR20211009000300071>(검색일: 2023.10.29).

이근, 2022, 신동아 2022.12월호 769호, p.37, <https://shindonga.donga.com/Print?cid=3770896>(검색일: 2023.10.4).

조선일보, “한국 대통령의 사상 첫 ‘자체 핵 보유’ 언급이 갖는 의미”,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1/13/6CORQ7T4NJDYHP72MQQGNMMJD4/>(검색일: 2023.10.29).

중앙일보, “냉전 시기 핵 전쟁 막아낸 영웅 페트로프, 77세로 사망”,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947846#home>(검색일: 2023.10.29).

중앙일보, “‘韓핵무장’에 선 또 선 곳은 美 확장억제 인식 ‘미묘한 간극’”,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3476#home>(검색일: 2023.10.29).

중앙일보, “핵무기급 미사일 이미 개발... 족쇄 풀린 한국, 北 추월한다[박용한 배틀그라운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69742#home>(검색일: 2023.10.29).

파이낸셜뉴스, “北이 한국 침공하면 지켜줘야하나?” 미국인에 물어보니... 절반만 ‘YES’”, <https://www.fnnews.com/news/202310050837574407>(검색일: 2023.10.29).

한겨레, “북한, ICBM 추정 미사일 발사... ‘미 정찰기 격추’ 경고 직후”,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099770.html>(검색일: 2023.10.29).

한겨레, “북한, 세계 최초로 저수지서 SLBM 발사... 우리 군 검색 못 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062038.html>(검색일: 2023.10.29).

한겨레, “트럼프 “한국이 제안한 방위비분담금 내가 거절... 큰 비율 내야””,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41324.html](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41324.html)(검색일: 2023.10.29).

한겨레, “윤, 미국서 “마음먹으면 1년내 핵무장”... 현실 가능성 있나”,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090109.html>(검색일: 2023.10.29).

BBS NEWS 코리아, “방위비분담금: 트럼프, 한국은 미국을 ‘벗겨 먹고 있다’ 발언의 실체는?”, <https://www.bbc.com/korean/news-49834765>(검색일: 2023.10.29).

BBC NEWS 코리아, “4년 만에 만난 김정은-푸틴, 러시아 ‘북 위성 개발 돕겠다’”,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03j28nkl1no>(검색일: 2023.10.29).

BBC News, “Kim Jong Un and Vladimir Putin meet for talks in Russia”, <https://www.bbc.com/news/world-asia-66787449>(검색일: 2023.10.29).

NK News online, “Mearsheimer: North Korean nukes a ‘force for stability’ on Korean Peninsula”, <https://www.nknews.org/2023/08/mearsheimer-north-korean-nukes-a-force-for-stability-on-korean-peninsula/>(검색일: 2023.10.29).

VOA 한국어 홈페이지, “미 전문가들 ”미국 정부 ‘한국 핵무장 여론’ 압박 받아... 워싱턴 주류 인식은 핵무장 반대”, <https://www.voakorea.com/a/6941008.html>(검색일: 2023.10.29).

【 Abstract 】

A Theoretical Analysis and Its Implications  
on South Korea's Nuclear Policy: Focusing on Defensive Realism

Seok Joon Kim

The debate on South Korea's nuclear policy has been intensifying since North Korea successfully conducted nuclear and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tests in 2017. However, the discussion concerning the analysis, diagnosis, and prescription of relevant policies based on international security theory has not been sufficiently comprehensive. This paper analyzes the primary tenets of the currently dominant research paradigm, realism—specifically, defensive realism—in relation to South Korea's nuclear policy. This theory posits that South Korea should establish its own nuclear program to balance power and, ultimately, to reduce tensions and ensure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s South Korea develops its nuclear program, it must establish practic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that guarantee the defensive intent of the nuclear weapons. This paper also argues that survival is paramount, outweighing any potential costs that might arise from pursuing a nuclear program. This counters criticisms suggesting South Korea's pursuit of its own nuclear program is unrealistic due to the associated costs.

**Key Words** : Defensive realism, Nuclear policy, Survival, Stability

---

• 논문투고일 : 2023년 10월 29일 / 논문심사완료일 : 2023년 11월 13일 / 게재확정일 : 2023년 11월 13일